

# 2022년 8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임윤주	08.07	[일요와이드] 가족 돌보는 청년들 '영케어러' 폭염엔 이중고 [뉴스포커스] '청와대의 대변신...국민의 복합예술문화공간으로'	
김홍태	08.14	[뉴스17]갈수록 늘어나는 전세 사기...다음달 근절 대책 발표 [뉴스프라임]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 재점화...존폐 '찬반'	
김창숙	08.21	[뉴스18] 윤대통령 "김대중-오부처 선언 계승"... 북한엔 담대한 구상 제안 [뉴스1번지] '자유' 33번 외친 경축사 ... 북에 '담대한 구상' 제시	
안호림	08.28	[뉴스프라임]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반지하' 탈출 "먼 얘기" [뉴스리뷰] 지지율-이준석...민감한 질문엔 즉답 피해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활동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2021. 01. 26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2 8/7(일)	임윤주	7월 31일 오전 9시 <일요와이드>에서는 영케어러들이 폭염속 이중고를 겪고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 케어러’란, 병이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아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뉴스는, 몸이 편치 않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20대 청년 사례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대학을 자퇴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세가 무서워 폭염에도 불구하고, 냉방기도 틀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가족 돌봄 청년들이 아직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최대 30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염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현재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보통 저소득층으로 묶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등 이슈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나, 세심하지 못한 지원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에 대해 주목하여, 의미 있는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자가 지적한 대로, 코로나 재확산 뿐 아니라 폭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시의적절한 뉴스였습니다. 영 케어러는, 영어로 ‘어리다’를 뜻하는 ‘영(young)’과 ‘돌보는 사람’을 뜻하는 ‘케어러(carer)’가 합쳐진 말입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뜻으로 동일한 상황에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 보도 뿐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해당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외국식 조어의 국어순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권고 사항은 추후 기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영 케어러 대신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대체어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천한 대체어에 대한 국민수용도 조사에서도 영 케어러 대신,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었습니다. 해당 용어는 과거 흔히 사용되던 ‘소년소녀가장’에서 의미가 조금 더 확대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뜻했던 용어에서 20~30대 청년들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확장된 의미의 새로운 용어가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인 만큼, ‘영 케어러’라는 외국어보다는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대체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 8/14(일)	김홍태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서민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다음 달 근절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3시 뉴스현장에서는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가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 90%를 웃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신축 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강통전세’ 계약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강서구의 경우 신축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강통주택으로 조사됐으며, 강서구의 뒤를 이어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등의 순으로 신축 빌라의 강통전세 비율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강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집의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택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됩니다, 이 경우 전세기간이 종료될 때 전세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금리 상승 등으로 집가격이 내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을 짚어주는 방송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가고 있어 전세보증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대비하는 방법과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계약을 할때 집 주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시가를 확인하고 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조금은 집고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비한다 하더라도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그 사후처리는 더욱 힘들어지는데요, 이때에는 결국 경매에 대비하게 될 것이고요,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하여 차후 보도에서도라도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p>	
2022 8/21(일)	김창숙	<p>8월15일 &lt;뉴스1번지&gt;에서는 이어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서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앵커가 북한이 비핵화하면 식량, 인프라, 금융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윤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바로 휴짓조각이 된 이명박 정부 정책을 꺼내들었다고 비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희 전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전문가들이 이미 공개된 것들을 종합선물세트를 묶어서 공개한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냐는 의견들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한 것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다고 평가했는데,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면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면 달라진 게 없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비판을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친북으로 비난한 것치고는 이번 제안 내용은 너무 순진한 내용이 아닌가 하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p>	<p>한일관계나 대북정책 등 비교적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 집단이 어디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언론의 균형잡힌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가 집단은 물론 사회 구성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p>

		<p>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의 국가안보1차장의 설명을 보더라도 초기협상과정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 정부와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당근을 던졌다면 이번 제안은 단계별로 나눠서 초기부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차별적이고, 특히 협상이 시작되면 유엔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진전된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 전 대변인은 이 문제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봐야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멀어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크림반도 침공시 러시아 제재에 대한 미국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거절했던 것을 이번에는 거절 못하고 참여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간의 경제공동체가 강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유엔제재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재의 강도를 약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이 북한에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런 현실까지 고민한 후에 담대한 구상이 나왔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의 패널들이 언급한 내용만 보더라도 대북관계가 매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문제와 사드문제, 러시아 제재문제까지 더해져 해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전제로한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정부와 정책상 큰 차별점이 없어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이 국제정치 역학관계 속에서 이번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p>	
--	--	--	--

		깊이있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한일관계나 대북정책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의 각계각층의 반응과 생각을 언론이 담아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 8/28(일)	안호림	17일 오후 8시 뉴스리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여야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잘 설명한 자리이고,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주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빈 수레만 요란한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국정기조 전환이나 인적 쇄신 입장이 없는 마이웨이 선언에 그쳤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도 현장 생중계를 진행했고,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기사, 패널들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사를 다수 보도했는데요. [뉴스리뷰] 기사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었던 국정지지울 하락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평가와 대책,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등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두어 보도했습니다. 기자회견의 핵심적 내용을 잘 요약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 “국정 지지율이나 여론 내분 사태 같은 민감한 현안 질문엔 정확한 답변을 피해갔다는 지적 역시 나옵니다”라고 마무리 멘트를 했는데, 이러한 지적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여론에 의하면’이라는 흔한 표현처럼 모호하게 넘어갔는데요, 명확한 출처가 함께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주체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2. 8. 07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5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주춤하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폭염까지 겹쳐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텐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아야하는 ‘영케어러’에 대한 소식과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문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7월 31일 오전 9시 <일요와이드>에서는 영케어러들이 폭염속 이중고를 겪고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 케어러’란, 병이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아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뉴스는, 몸이 편치 않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20대 청년 사례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대학을 자퇴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세가 무서워 폭염에도 불구하고, 냉방기도 틀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가족 돌봄 청년들이 아직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최대 30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염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현재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보통 저소득층으로 묶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등 이슈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나, 세심하지 못한 지원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에 대해 주목하여, 의미 있는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자가 지적한 대로, 코로나 재확산 뿐 아니라 폭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시의적절한 뉴스였습니다. 영 케어러는, 영어로 ‘어리다’를 뜻하는 ‘영(young)’과 ‘돌보는 사람’을 뜻하는 ‘케어러(carer)’가 합쳐진 말입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뜻으로 동일한 상황에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본 보도 뿐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해당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영 케어러 대신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대체어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천한 대체어에 대한 국민수용도 조사에서도 영 케어러 대신,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었습니다. 해당 용어는 과거 흔히 사용되던 ‘소년소녀가장’에서 의미가 조금 더 확대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뜻했던 용어에서 20~30대 청년들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확장된 의미의 새로운 용어가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인 만큼, ‘영 케어러’라는 외국어보다는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대체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보도가 있습니다. 7월 30일 오전 11시 <토요와이드>에서는 주거빈곤 아동가구와 관련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곰팡이가 가득 핀, 창문을 열어도 통풍이 원활하지 못한 집에서 폭염을 버티고 있는 가정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가구원 중에서도 아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은 한여름에도 끊이지 않는 기침과 결막염으로 고생 중입니다. 아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주 돌봄자의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으로 저소득 가구이나, 주거 면적으로만 따지면 주거빈곤 가구에 속하지 않아 주거지원 사업에서는 비껴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주거빈곤 아동가구가 전체의 15% 수준이나, 앞선

사례처럼 주거환경 자체가 열악한 곳까지 포함하면, 실제 주거 취약계층은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주거빈곤은 국가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거환경을 뜻하며, 옥탑방, 지하방 및 고시원, 모텔 등의 비주택 거주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대로 단순히 저소득층이 아닌 주거 환경 기준에 따른 취약 계층으로,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검색해보고자 했으나,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불가했습니다. 방송 뉴스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면 관심 있는 시청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출처를 다룰 때는 명확하게 하는 것 또한 보도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본 '가정 돌봄 청년'과 본 보도에서 살펴본 '주거 빈곤 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등장했는데요. 그만큼 연합뉴스TV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후속 취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세분화하여 살펴보아야 할 취약 계층들에 대한 기준과 문제점 등을 주제로 한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보 관련 보도입니다. 7월 29일 오후 2시 뉴스현장에서는 미 상원외교위원장의 발언을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보도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미국과 다른 동맹이 전보다 덜 안전하게 됐고 북한은 더 고립되고 위협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진짜 로드맵과 진지한 외교를 우선하는 새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보도는 이후 후속 보도나 관련 보도가 추가적으로 보도되지 않아, 해당 보도만으로는 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본 보도만으로는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난을 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신 뉴스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의 발언을 조금 더 정리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연설에서 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협의체인 쿼드(Quad)에 가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위원장이 연설에서 주요하게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이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사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된 지도 약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도 130만 명이 넘어설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활용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TV에서 보도한 뉴스 살펴 보겠습니다. 7월 22일 오전 10시 <뉴스포커스>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연하여 청와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박보균 장관은 먼저 효과성에 대해 '상징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정적인 이미지였던 청와대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예술품, 역대 대통령의 역사문화 공간, 수목원과 건축미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들이 자문단으로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으며, 보존과 활용 개념에 대해서는 충돌의 개념이 아닌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31일 오전9시 <일요와이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해 일고 있는 논란을 전했습니다. 먼저 문체부

의 구상은 앞서 <뉴스포커스>에서 박보균 장관이 직접 전했던 것처럼, 청와대를 복합 예술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관, 영빈관 등 주요 건물에는 청와대가 소장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전시 위주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미술계와 일부 관광업계는 반색했지만, 담당 부처 내부에서 우려가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재청의 정책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역사성을 고려한 조사나 연구가 충분치 않다"며 우려를 표했고, 문화재청 노조도 "거대한 공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이라 반발하는 등 담당 부처 내 혼선이 노출되어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문화재청은 역사공간으로서 '보존'에, 문체부는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활용'에 방점을 두며 각각의 청사진을 그려왔는데요, 보도는 보존과 활용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며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뉴스포커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청와대 활용 방안에 관해 설명해주어,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한된 질문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직접 설명했던 활용 방안 외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앵커가 질문했으나, 더 구체적이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상 제한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점이므로, 이런 경우 추가 보도 등으로 보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31일 <일요와이드>의 뉴스가 보완이 되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뉴스는 부처간 상이한 시각 차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그 외 관련된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만큼, 국민들 역시 청와대를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각 부처의 향후 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보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청와대는 국민의 대표자 공간으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곳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연말까지 활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밝혔는데요. 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 국민들 역시 해당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 보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2. 8. 1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5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서민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다음 달 근절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는데요, 현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심판회의의 첫 논의 주제로 선정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는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집약체로 6개 탐재체 중 5개가 우리나라 기술이라고 하고요, 전세계 과학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최근 3년 동안 500명에 가까운 전세 사기범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는 1,300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처벌 강화 방안 등 대책을 다음 달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2019년에는 95명이 검거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43명이 검거돼 두 배를 훌쩍 넘었다고 했는데요, 그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를 노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범 중 절반 정도가 다세대주택 물건이었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그 뒤를 이었다는데요, 사기 수법으로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지난달 '강동 전세' 보호 대책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9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매칭 서비스, 법률상담 알선 등의 도움을 줄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지난달 시작한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내년 1월까지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3시 뉴스현장에서는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가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 90%를 웃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신축 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깡통전세' 계약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강서구의 경우 신축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깡통주택으로 조사됐으며, 강서구의 뒤를 이어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등의 순으로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비율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집의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를 말하는데도 주택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됩니다, 이 경우 전세기간이 종료될 때 전세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금리 상승 등으로 집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전세보증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대비하는 방법과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계약을 할때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시가를 확인하고 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금은 집고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비한다 하더라도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그 사후처리는 더욱 힘들어지는데, 이때에는 결국 경매에 대비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하여 차후 보도에서라도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지난 5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두고 다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는데,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지난 2012년 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경제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무휴업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상인들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입 당시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도 대두됐었는데, 10년 사이 주 52시간제 정착 등 변화에 따라 시민도 실 권리에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마트업계는 찬반 논쟁이 재점화되는 사실만으로 반기는 분위기라는데, 업계 관계자는 일요일 매출이 평일의 3배까지 많이 나온다면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한 상황에서 오프라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온라인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 토론을 이어가는데, 앞서 이해관계자 등과 규제심판회의를 처음 열었고 다음 회의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10년 만에 마트 휴업일이 사라질지 주목된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6시 뉴스워치내 그래픽뉴스에서는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와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라고 전하며, 국무조정실은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하면서, 첫 심판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을 첫 안건으로 선정할 건 국민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됐다고 하며, 대형마트는 매달 2번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되는 지난 10년간 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존치를 원하는 쪽의 의견은 서로 엇갈리며 논쟁과 갈등을 되풀이 해왔는데, 대형마트 업계에선 유통기업 규제완화와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에 더해 대형마트 의무휴업까지 없다면 골목상권은 사지로 내몰릴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열린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데, 규제를 없애느냐 아니냐 하는 찬반 입장을 떠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갈등을 최소화할 대안을 숙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규제심판회의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보니 소관부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마무리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가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모두가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들겠다"고 밝히면서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하여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한 바 있습니다.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등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합헌 결정 후 4년이 지난 현재 어느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인지 이 부분은 집고 갈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보호에도 미흡하고 전통시장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 위 영업제한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고는 하나, 과연 그러한 비판과 영업제한의 폐지가 그 대안으로 합당한지 아님 수정된 모습이 필요한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심판부의 첫 회의 주제이고 매우 첨예한 사안이어서 의견제시와 청취 그리고 합의의 과정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기사에서 잘 지적했듯이 규제심판회의의 결과가 강제성이 없고 소관부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처음으로 실시되는 규제심판부의 역할이 어떠한지 지켜보게 되는 부분으로, 상생의 길로 나가는 선례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5일 저녁 8시 뉴스리뷰에서는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5일 발사되어 달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고 전했는데, 지상국과의 첫 교신도 잘 마쳤고 궤도 진입도 순조로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누리의 최종 성공여부는 달 궤도에 진입하는 12월 말에 판가름난다고 하는데, 기자는 다누리를 실은 팰컨9 로켓이 힘차게 하늘로 솟아올라, 발사 40분쯤 뒤 발사체에서 완전히 분리됐고, 발사 1시간 30분쯤 뒤인 오전 9시 40분, 호주 캔버라에 있는 심우주 안테나를 통한 첫 교신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다누리의 궤적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데,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지구에서 156만km 떨어진 심우주까지 멀리 돌아가는 궤적을 택한 다누리는 달 궤도 진입까지 4개월 반에 걸친 긴 여정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오는 12월 31일, 달 고도 100km 원 궤도에 안착해야 비로소 성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달에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나라가 된다는데,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지난 30년 1단계를 마무리하고

큰 도약의 2단계를 앞둔 시점이라고 합니다. 달 궤도에 안착한다면 다누리는 장착된 6개 탑재체를 이용해 1년간 달 탐사에 나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8시 뉴스리뷰에서는 지금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낸 나라는 6개국이며, 이 중 사람이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무인 착륙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달 탐사 선두 주자 경쟁이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는 2025년까지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를 위한 첫 비행 미션 '아르테미스1'이 이르면 오는 29일 발사된다고 합니다. 한 때 미국보다 앞선 우주기술력을 자랑하던 러시아도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맞대응하듯, 지난해 '루나 25호'로 46년 만에 달 착륙에 성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루나 25호의 발사 예정일은 다음 달 말이지만 장비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유럽 우주국과의 협력까지 중단되면서 발사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역시 2019년 '창어 4호'를 통해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고, '창어 5호'는 달 샘플 채취 후 지구 귀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2024년 창어 6호와 7호를 발사해 달 남극 탐사, 샘플 확보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달을 다 누리고 오라는 의미에서 다누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요, 대한민국의 다누리 발사는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집약체로 6개 탑재체 중 5개가 우리기술이라고 합니다. 매우 대단한 성과인데요, 실제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에 주목했고, 세계의 과학자들은 특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의 다누리 탐사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탑재체 5개가 우리의 기술이라 처음 시도되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달의 비밀을 많이 밝혀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랑스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조해 보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누리는 한국전문연구원이 개발한 광시야 편광카메라를 비롯하여, 고해상도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인터넷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탑재했다는 데요, 한국이 개발한 5개의 장비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달 영구음영지역 관측카메라 '새도캠'이 달 탐사에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지난달 28일 다누리에 대한 기사를 소개했고,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도 한국이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든다고 보도하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누리 발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우주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도 한국의 우주 탐사 첫 걸음이라며 다누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NASA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의 다누리가 마지막까지 훌륭한 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2. 8. 21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6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습니다. 연신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였고, 세계시민과의 연대, 공적부문 건축 및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특히, 김대중-오부처 선언을 계승해 빠른 한일관계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내용,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서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고 내용 등이 주목을 받았는데, 8월 15일 <오후 6시 뉴스>에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의 주요내용을 짚었습니다. 기자는 윤 대통령이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이제는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고 밝히며, 두 나라가 미래를 지향할 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1998년 김대중-오부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과의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향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핵 포기 시 식량과 함께 발전시설, 항만, 공항, 병원을 아우르는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기자는 취임사에서 밝혔던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 방안이 빠져있어 북한이 호응할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3분간 이어진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언급했는데, 특히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의 본질이 자유를 향한 투쟁이었다며, 공산세력과 맞서 싸우거나,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 모두 독립운동가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공공 부문 건축과 건전한 재정 운용에 대한 발표내용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제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선 튼튼한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쓸 것이며, 약자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는 게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애인 돌봄과 보호시설 청년 자립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하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의 해법으로는 도약과 혁신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선 민간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앞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복구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수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15일 오후 4시 <뉴스1번지>에서는 윤대통령의 경축사 내용 중 한일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 반응을 짚어봤습니다. 우선 앵커는 윤대통령이 김대중-오부처 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면서 위안부나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 국회의원은 흔히들 광복절에 빠져서는 안 될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대해서는 나름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의 일본은 우리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투쟁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는 점을 좀더 부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덧붙여 중요한 것은 일본의 태도인데, 8월 15일에 기사나 총리가 신사참배 공물 대금을 봉납한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은 계속될테고 그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유감을 표해야 하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같이 갈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성희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일본측이 아무것도 바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 요청만 하고 있고, 특히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결과를 무시한 채 우리 기업에 손만 대면 한일관계 끝이다 식의 태도를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범기업의 한국 자산을 동결해서 현금화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카드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주일대사가 먼저 나서서 이것을 현금화하면 안된다는 선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틀이 안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교부가 피해자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에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열린 공간에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적절한 협상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성범 전 국회의원은 한일관계가 24년 전에 나온 김대중-오부처 선언에서 한발짝도 못나갔다는 점이 놀라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야스쿠니 참배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나 외교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비판이나 유감을 표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김대중-오부처 선언을 근거로 일본을 압박하며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끌고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한 윤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이

한일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같은날, 일본에서는 기사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 패전일 추모사에서 반성을 언급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 지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래전부터 역사적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부 역시 협력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뉴스TV가 냉정한 입장에서 대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전략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효과적인 전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정부가 현명한 전략들을 수립해갈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1번지>에서는 이어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서면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앵커가 북한이 비핵화하면 식량, 인프라, 금융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윤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바로 휴직조각이 된 이명박 정부 정책을 꺼내들었다고 비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희 전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전문가들이 이미 공개된 것들을 종합선물세트를 묶어서 공개한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냐는 의견들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한 것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잘 못했다고 평가했는데,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면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면 달라진 게 없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비판을 했으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친북으로 비난한 것치고는 이번 제안 내용은 너무 순진한 내용이 아닌가 하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실의 국가안보1차장의 설명을 보더라도 초기협상 과정에서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 정부와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당근을 던졌다면 이번 제안은 단계별로 나눠서 초기부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차별적이고, 특히 협상이 시작되면 유엔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와 우리정부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진전된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 전 대변인은 이 문제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봐야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멀어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크림반도 침공시 러시아 제재에 대한 미국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거절했던 것을 이번에는 거절 못하고 참여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간의 경제공동체가 강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유엔제재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재의 강도를 약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이 북한에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런 현실까지 고민한 후에 담대한 구상이 나왔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의 패널들이 언급한 내용만 보더라도 대북관계가 매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 문제와 사드문제, 러시아 제재 문제까지 더해져 해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전제로한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정부와 정책상 큰 차별점이 없어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이 국제정치 역학관계 속에서 이번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깊이있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한일관계나 대북정책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의 각계각층의 반응과 생각을 언론이 담아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호립 시청자평가원(22. 8. 28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6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 16, 17, 18일 3일에 걸쳐 이 문

제를 리포트 형식으로 6회에 걸쳐 심층 취재, 보도했는데요. 먼저 지난 16일 방송된 오후 5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인천에 위치한 아파트 3곳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갈 처지를 전하며 시작합니다. 아파트 전체를 깡통 전세로 돌린 집주인이 잠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인천의 한 소형아파트로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로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한 동 대부분을 1명이 소유하고 있고, 전부 임대중인데, 차례대로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날릴 위기라고 전합니다. 맞은 편의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처지인데요. 중개업소가 보증서까지 써줬지만 허위였다고 합니다. 이들 세 곳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만 29명, 보증금 규모는 23억원에 달합니다. 기사는 이들 세 군데 아파트의 거래를 4개의 중개업소가 전담해서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라진 집주인을 추적하는 동시에 계약을 도맡았던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합니다. 이어서 전세사기가 청년층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법률 지원 등 사회적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한다는 내용, 479채 빌라를 소유자가 경찰에 검거 소식 등 전세사기 관련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전세사기에 대한 마지막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8일 오후 5시 뉴스에는 앞서 보도한 전세사기 사례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전세사기의 주된 피해자들은 2030 청년층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 조짐으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승영 경찰국 수사국장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시도청에도 296(이백아흔여섯)개 전담 수사팀, 1,681(천육백여드한명)이 특별 단속에 투입되는 등 대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7월 25일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의 첫 지시도 전세사기 근절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250(이백십)여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범죄수익 추적, 환수 등 피해회복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합니다. 17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세사기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진행자의 첫 질문은 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는 최근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7월 총 전세사기는 421(사백스물한)건, 피해액은 872억원으로 최대 건수, 최대피해액을 기록했다고 답했습니다. 중개업소 또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개업소의 신뢰성까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개업소 등록 여부는 확인할 수 있고, 자주 상호가 바뀐다면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이 전세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통해 보상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기'인데 대개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되는 이유는 '사기죄'성립을 위한 고의성 입증에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강조하는데,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근저당이 잡혀있는 등 위험요인이 많은 경우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당할 경우 위험이 높은 매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전세가격 상담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가격 파악이 어려운 매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세계약에서 주의할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프라임]에서 전문가가 밝혔듯이 최근 전세사기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리포트로 여섯차례에 걸쳐 집중분석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의 대책을 알아본 점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2분 남짓의 짧은 기사여서 각각의 사례들을 충분히 깊이있고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6편이나 되지만, 아쉬운 점도 많은데요. 전세사기의 추세, 피해규모, 유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망하여,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록 해주는 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현재 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아쉽습니다. [뉴스프라이미]의 전문가 인터뷰는 오후 5시 뉴스의 집중보도와는 별개로 진행되었는데, 전문가가 설명한 주요 내용들이 이번 집중기사에 첨부되어 보도되었으면 보다 완결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둘째주에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림동에서는 반지하에 거주하던 이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도 있었는데요. 18일 오후 7시 뉴스프라이미에서는 반지하 가구들의 실태와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폭우로 인해 반지하 가구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자,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를 점차 없애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시간당 100mm가 넘게 내린 폭우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 주택 대부분이 침수됐는데, 반지하 거주자 대다수가 아직 복구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반지하에서 나가고 싶어도 거주자들은 임대료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를 2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고, 지상층에 거주할 경우 월 20만원씩 최대 2년 월세를 보조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고령의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대책이라고 반응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약 20%가 노년 가구주고, 저소득층이 75%라며 거주자들은 당장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17일 오전 8시 라이브투데이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 연구소장이 출연해 반지하 주택의 실태와 문제점, 수해피해방지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질문은 서울시에서는 반지하나 지하 거주민들의 가구 비율에 대한 것이었는데, 약 5%의 서울시민, 20만 가구 정도가 지하에 거주 중이며, 유독 우리나라에 반지하 거주가 많은 이유는 1970년 건축법 당시 반지하 거주를 의무화했는데, 서울에 집이 부족하여, 농촌에서 상경한 이들의 많은 수가 지하공간을 주거로 사용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반지하 주택이 집중되었다고 전합니다. 서울시의 반지하주택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 지하에 대한 대책이 우선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공급되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반지하문제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반지하 거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확보가 중요하데, 지난 30년 동안 공급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26만호에 불과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며, 나아가 서울시와 같이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반지하 주택에서의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증액을 통해 주거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연합뉴스TV는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뉴스프라이미]기사는 서울시가 장기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반지하 주택에 주거하고 있는 이들이 경제적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분석이 아쉽습니다. 현재 반지하 주택 중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으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경우, 반지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임대료 때문이라고 했는데, 현재 주거비 보다 얼마나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반지하를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질까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라이브투데이]의 전문가의 인터뷰가 이런 부족함을 다소 채우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나아가 서울시 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반지하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누락된 점도 아쉬웠습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데다 여당 내에서는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분란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17일 오후 8시 뉴스리뷰에서도 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쇄신 방향을 제시하는 대신,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

다. 국정운영 부정평가에 대한 최대원인으로 꼽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면서도, 국면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라고 답했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윤 대통령이 쓴소리도 경청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국정 지지율이나 여론 내분 사태 같은 민감한 현안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평가했습니다. 17일 오후 8시 뉴스리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여야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잘 설명한 자리이고,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주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빈 수레만 요란한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했고, 정의당은 국정기조 전환이나 인적 쇄신 입장이 없는 마이웨이 선언에 그쳤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도 현장 생중계를 진행했고,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기사, 패널들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사를 다수 보도했는데요. [뉴스리뷰]기사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었던 국정지지율 하락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평가와 대책,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등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두어 보도했습니다. 기자회견의 핵심적 내용을 잘 요약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 “국정 지지율이나 여론 내분 사태 같은 민감한 현안 질문엔 정확한 답변을 피해갔다는 지적 역시 나옵니다”라고 마무리 멘트를 했는데요. 이러한 지적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여론에 의하면’이라는 흔한 표현처럼 모호하게 넘어갔는데요. 명확한 출처가 함께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22년 8월 7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2년 8월 14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b>임윤주</b> 시청자평가원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수료생</p>	 <p>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b>김홍태</b> 시청자평가원 대한방송연예인협회 이사</p>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22년 8월 21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2년 8월 28일 04시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b>김창숙</b> 시청자평가원 동국대학교 교양학부 26기</p>	 <p>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b>안호림</b> 시청자평가원 인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p>